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296-13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2021~2025년)

2021. 9.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I. 계획의 개요	1
II. 친환경농업 현황	2
1. 산업 현황	2
2. 시장 전망	4
III. 친환경농업 육성 기본 방향	6
1. 제4차 계획의 성과 및 개선과제	6
2. 제5차 계획의 추진 방향	9
3. 비전 및 목표	10
IV. 세부 추진방안	11
1. 탄소 감축 농업기반 구축	11
2.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13
3.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18
V. 기대효과	22
VI. 계획의 추진체계	23
[참고 1] 주요국의 유기농업 관련 정책	5
[참고 2] 집적지구 사례	16
[참고 3] 세부 추진과제 및 담당부서 목록	24
[참고 4] 제4차 계획과 제5차 계획의 비교	25

□ 법적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 '01년도 제1차 육성계획 수립 이후 제4차 계획('16~'20)까지 수립
- 광역·기초 지자체도 정부 계획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함

□ 수립 경과

- 국내 친환경농업 현황과 해외 사례 조사, 정책 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KREI, '20.5.~12월)
 - 인증제도,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등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 * 유기인증 확대, 생산기반 집적화, 수요처 다변화, 산지와 소비지간 연계 강화,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직불제 연계, 환경관리 방안 등
- 친환경단체·유통업체·소비자단체 등과 『친환경농업 비전기획단』을 구성('20.6.24.~9.17.)하여,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세부계획 논의
 - 친환경농업지구 확대, 중앙과 지자체의 계획 연계, 온라인 및 직거래 활성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등 논의
- 농진청 등과 추가 과제 발굴 및 검토 진행('20.9월)
 -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교육 확대 등
- 친환경단체·소비자단체·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그간 논의된 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21.2.~8월)
 - 민간 및 공공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과학적 평가 추진, 과정 중심의 인증제 필요 등의 의견 제시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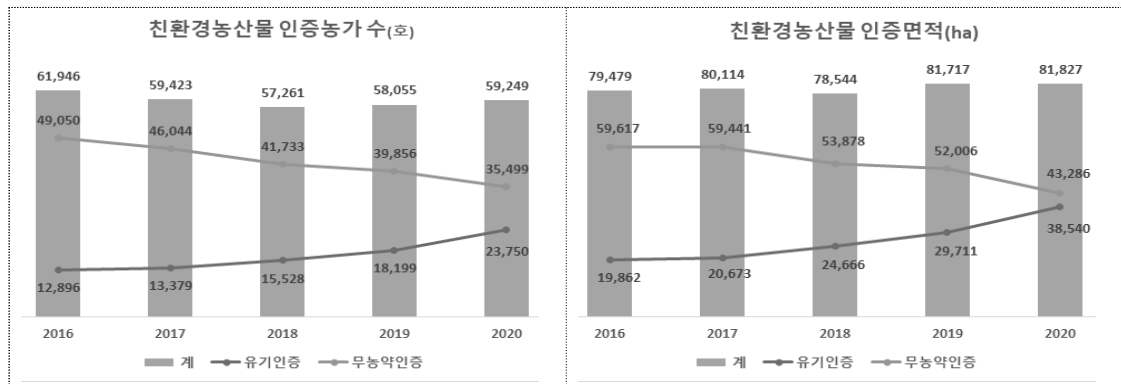
친환경농업 현황

1

산업 현황

1) 농산물

- (농가 수) '20년 기준, 인증농가 수는 **59,249호**로, '18년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기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소폭 증가
 - 최근 5년간 유기(23,750호)는 증가, 무농약(35,499호)은 감소 추세
 - * 연평균 친환경 인증농가 수 증감률('16~'20년) : (유기) 16.5%↑, (무농약) △7.8%
- (면적 및 출하량) '20년 기준, 인증면적은 **81,827ha**(농지면적의 5.2%), 출하량은 **496천톤**으로, 최근 소폭 확대 추세
 - 최근 5년간 유기(38,540ha, 138천톤)는 증가, 무농약(43,286ha, 358천톤)은 감소
 - * 연평균 친환경 인증면적 증감률('16~'20년) : (유기) 18.0%↑, (무농약) △7.7%
 - * 연평균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증감률('16~'20년) : (유기) 5.8%↑, (무농약) △6.1%



- (유통경로) 생산자는 지역농협에 가장 많이 출하(물량 기준, 37.6%), 소비단계에서는 학교급식(39%)에서 가장 많이 판매
- (시장규모) '20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약 **1조 5,153억원** * (추정치)이며, 이 중 학교급식이 4,959억원으로 약 33%(금액 기준) 차지
 - * 15개 대표품목의 '시장 유통량(생산량 × 시장 유통 비중) × 시장 판매가격(at 시장조사 가격)'을 합한 금액, 이외 품목은 15개 대표품목의 평균치를 사용(KREI)

2) 축산물

- (농가 수 및 출하량) '20년 기준, 유기 농가 수는 **104호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출하량은 **48.2천톤**으로 대부분이 우유(97.9%)
 - * 출하량('20년, 톤) : (우유) 47,201 (계란) 522 (닭고기) 139 (소고기) 222 (돼지고기) 66
- (유통경로) 학교급식(4,800억원, 45.0%), 생협(14.9%) 등으로 주로 판매
- (시장규모) '19년 기준, 유기와 무항생제를 합한 시장규모는 약 **1조 660억원** *(추정치)이나, 이 중 유기는 약 **426억원** ** 수준
 - * 축산물 소매업체 25개소 설문조사 결과와 충남 학교급식을 토대로 오프라인 시장 규모 추정, 마켓컬리의 축산물 매출 비중을 감안하여 온라인 시장 규모 추정(농식품신유통연구원)
 - ** '20년 전체 출하량 중 유기와 무항생제의 비중(유기 4%, 무항생제 96%) 감안

3) 유기가공식품

- (업체 수) '20년 기준, 인증업체 수는 **842개소**(식품 823, 비식용 19)로, 사업장 규모와 매출 규모는 영세한 편
 - * 사업장 규모는 1~4명이 35.1%, 매출액은 1천만원~1억원 미만이 약 30%
- (제품 수) '20년 기준, 인증제품 수는 **7,608개**(식품 7,330, 비식용 278)로, 업체 수 대비 제품 수가 많은 편
 - 식품으로는 주로 차류(27.5%), 음료류(15.1%), 곡류가공품(13.4%)이 생산
 - 비식용 유기가공품은 전부 사료, 이 중 반려동물 사료가 81% 차지
- (유통경로) 직거래(27.4%)를 통해 주로 판매되며, 인터넷쇼핑(19.6%), 친환경전문점(17.3%), 대형마트(13.1%) 순
- (시장규모) '19년 기준,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약 **1,724억원** * 수준
 - * 친환경전문점, 생협, 대형마트, 백화점, SSM,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기농식품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농식품신유통연구원)

-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06년부터 매년 약 5.8%씩 성장하여 '25년에 2조 1,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18, KREI)
 - 코로나19기후위기 등의 영향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21, KREI)
 -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 기업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심
 - 코로나19·1인가구 증가 등으로 온라인·편의점 등 근거리 소매가 활성화되는 추세로, 이를 활용한 친환경농식품 판매 확대 필요
 - * 농축수산물·음식료품 온라인 거래액 : ('17) 1.04조원 → ('20) 2.59 (25배↑)
 - ** '21년 세븐일레븐은 신선식품 브랜드 '세븐팜' 출시, 10,501개 점포 중 400개에 입점
- (세계) '19년 세계 유기식품(농산물 포함) 시장규모는 약 139조원('21, IFOAM)으로 '27년까지 연평균 12.2%의 성장률 전망('20, Meticulous Mkt Research)
 - 전 세계 유기식품 시장 중 약 90%가 북미와 유럽에 집중
 - * '19년도 유기식품 시장규모(조원) : (미국) 58, (독일) 16, (프랑스) 15, (중국) 11, (이탈리아) 4.7, (캐나다) 4.5, (스위스) 3.8, (영국) 3.5, (스웨덴) 2.8, (스페인) 2.8
 - 유기식품을 소비할 때, 미국은 주로 '건강', 유럽은 '환경', 중국은 '식품안전 및 품질'을 고려하는 등 국가별로 가치소비 기준 상이
 - 한류 열풍 등으로 국내 농식품 수출액이 크게 증가('20년 75.7억불, '19년 대비 7.7%↑), 이러한 추세를 유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활용할 필요
 - '20년 기준, 유기식품 수입액은 1억 9,700만 달러이며, 수출액은 1,080만달러로, 수출 보다 수입이 많은 편
 - * 주요 수입품은 바나나, 치즈, 설탕, 수출품은 다류와 곡류가공품

참고1 주요국의 유기농업 관련 정책

- (EU) 그린딜의 세부 전략인 'A Farm to Fork Strategy('20)'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 및 유기농업 활성화 추진
 - 2030년까지 ① 농약 사용량 50% 감축 ② 비료 사용량 최소 20% 감축 ③ 가축 및 양식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판매량 50% 감축 ④ 농경지의 25%까지 유기농업 실시
- (독일) '유기농업 미래전략('17)'을 통해 유기농업 육성
 - 2030년까지 유기농업 20% 달성을 목표로, ① 유기농업 관련 법규정 정비, ②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유기농업으로의 쉬운 전환 지원, ③ 유기농업 시스템의 성과 향상, ④ 잠재적 수요층 확대, ⑤ 환경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
- (미국) 유기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직접지원) 인증 비용 지원*, 유기농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회적 약자 등에 농지 임차료 지원, 영구 초지 조성 및 가축분뇨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등),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대한 인증 면제**, 재해보험 지원 등
 - * 인증 신청비, 검사비, 인증검사원 출장비 등으로 건당 최대 750달러 지원
 - ** 연간 유기농산물 매출액 5천달러 이하 농가는 인증 없이도 유기농으로 판매 가능
 - (간접지원) 연구개발, 정보제공, 마케팅·인프라 지원 등

1 제4차 계획('16~'20)의 성과 및 개선과제

< 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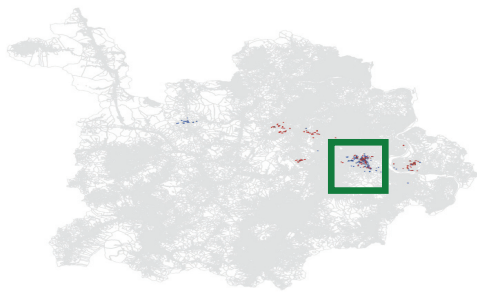
- (생산)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기한 폐지('18),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18) 등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 * (개편 前) 유기 논, 밭(60만원/ha, 120) / 무농약 논, 밭(40, 100) → (개편 後) 유기 논, 과수, 기타(70, 140, 130) / 무농약 논, 과수, 기타(50, 120, 110)
- (유통) 광역 산지 유통조직 육성* ('17~'21: 9개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추가 조성('17, 나주) 등으로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제고에 기여
 - * 충남·충북·전북·전남('17~'19년), 제주('19~'20), 강원·경남('20~'21), 경기·경북('21~'22)
- (가공)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17)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20),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완화* 로 가공산업 활성화 도모
 - * (개선 前) 유기원료 함량 95% 이상에 한해 인증로고 등 유기 인증 표시 → (개선 後) 95% 이상에 대한 유기 인증 표시 + 70% 이상에 대해 주표시면에 유기 표기 가능
- (소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감소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할인판매·꾸러미 등 대체 판로 적극 지원('20, 3,940억원)
- (인증)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17), 부실 인증기관 및 상습 인증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20) 등 인증제도 관리 강화
 - * 연속 3회 최하위 등급 받은 인증기관 지정 취소, 인증기준 상습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 등
- 인증 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생략, 인증신청서 처리기한 단축(60일 → 50일) 등 인증 농가의 편의 제고
- (기타) 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16)으로 생산자 주도의 수급 관리 체계 구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19)으로 주민 주도의 농업환경 개선 추진

< 개선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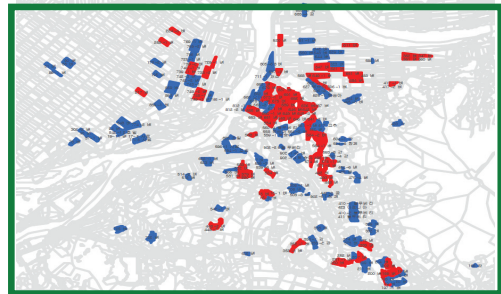
1)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미흡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04~, 641개)에도 불구하고, 지구 지정시 연접성 등의 미고려로 친환경 농가가 분산, 비의도적 오염에의 노출 위험 상존
 - 농약 사용 기준 위반(전체의 약 46.6%)으로 인한 인증 취소가 많은 상황
 - * 친환경인증 취소 건수: ('15) 3,223 → ('18) 3,290 → ('19) 2,635 → ('20) 2,702

< 사례 : 경북 상주시 한우물 친환경농업지구(9개 읍·면·동 포함) >



- ◆ 박스 표시는 지구 내 “동문동” 사례
 - 인증 면적 : 24.6ha
 - * 지구 인증면적 59.4ha의 약 41% 차지
 - 주요 품목 : 벼



- ◆ 좌측 박스를 확대(“동문동” 사례)
 - 적색은 인증면적, 청색은 비인증면적

- 또한, 기존 지구에서는 고령화 및 판로와의 연계 부족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 지구의 유지 및 확대 어려움
 - 친환경농업에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지구 지정시 안정적 판로 확보 여부 등 추진주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축산물의 경우, 어려운 인증기준* 및 높은 생산비로 인해 유기축산 인증 농가가 100호 내외로 정체, 출하품목도 우유에 편중(97.9%)
 - * 유기사료 공급, 목초자·사료작물 재배지 확보, 낮은 사육밀도, 농약·항생제 사용금지 등
 - 무항생제 농가의 유기 전환 유도 및 인증 품목 확대 등 필요

2)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 한계

□ 친환경농산물은 **다품목(약 150개) 소량생산 구조로, 높은 판매가(일반 대비 1.5배* ↑)와 연중 안정적 공급의 어려움** 등으로 **판로 확보에 애로**

* 일반농업 대비 친환경농업 생산비는 평균 1.45배 높음('16, KREI)

○ 주로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급식, 생협·친환경전문점** 중심으로 판매

○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광역 산지 유통조직 및 물류센터**를 지원하였으나, 생산자조직의 마케팅 역량 한계로 **학교급식 공급에 한정 운영**

* 광역 산지 유통조직 출하처 중 약 62%가 학교급식

□ 친환경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등으로의 **판로 확대**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소비자의 가치소비**가 확대될 필요

○ 독일·스위스 등 **유기식품 선진국은 일반 소매점 판매 비중이 높은 상황**

< '19년 해외 주요국의 유기식품 판매 형태(출처 : IFOAM) >

(단위 : %)

구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일반점	59.6	54.9	54.9	82.5	95.3	83.6
전문점	26.6	28.3	23.6	9.3	4.7	16.2
기타	13.9	16.8	21.5	8.1	-	-

○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환경가치*** 소비 확대로 지속적 소비 창출 필요

* 친환경 농산물 구입 이유('20, 한국갤럽) : 안전 85.3%, 건강 74.3%, **환경보호 27.5%**

3) 농업환경 관리 미흡

□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가 쉽게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고투입농법 지속 등 환경에 대한 고려 미흡**

* '18년 기준, 국내 질소 수지는 OECD 평균의 3.3배(1위), 인 수지는 10.4배(2위)

**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kg/ha) : ('16) 268 → ('18) 262 → ('20) 266

○ 친환경농가 중심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농업자재**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성분(NPK) 함량이 표시되지 않아 과다 사용 우려**

* 부산물비료(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비료 등) 사용량(추정) : ('00) 765kg/ha → ('19) 3,726

□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정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자체의 관심은 저조한 상황

* 군 및 도농복합시 136개 중 67개만이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①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확대 기반 마련

- 생산자·소비자·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증진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전달·확산
- 친환경농식품 유통채널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구매접근성 제고
- 급식시장 및 가공·외식시장 등으로 친환경농식품 소비 기반 확대

②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비 확대에 대응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육성하여 산지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가공·외식 등 소비자와의 계약재배 여건 마련
-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보급으로 친환경농업 생산성 제고
- 젊은 인력 유입 촉진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친환경농업의 환경기여도 평가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개편 방향에 맞춰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③ 농업환경 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쉬운 전환 유도

- 비료·농약 사용 감축 및 자원순환을 통해 저투입 농업 활성화
- 토양 양분 정보 DB화 등 농업환경 종합 관리체계 구축
- 공익직불제 개편 방향에 맞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개편, 지자체의 실천계획 수립 확대로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 강화

비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확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kg/ha) : ('20) 266/10.5 → ('25) 233/9.5 ◆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인식 제고(%) : ('20) 27.5 → ('25) 50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확대(%) : ('20) 5.2 → ('25) 10

주요 추진 과제	탄소 감축 농업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 농약 사용 감축 · 시 · 군 단위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개편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 젊은 인력 유입 촉진 ·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추진 ·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확대 · 친환경농업 위해요인 관리 강화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 지역단위 푸드플랜 활용 시장 확대 · 급식시장 및 민간 소비시장 확대 · 친환경 외식·가공산업 활성화

IV

세부 추진방안

1

탄소 감축 농업 기반 구축

1-① 농업 환경관리 강화

< 추진 목표 >

◇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감축(kg/ha) : ('20) 266 / 10.5 → ('25) 233 / 9.5

◇ 경축순환 시범지구 조성(개소) : ('21) 3 → ('25) 15

□ 적정 시비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 토양 검정 필지와 시비처방 대상 작물 확대*, 이를 바탕으로 한 농가 컨설팅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시비처방 의무화 여건 마련

* 토양 검정 필지 건수/시비처방 대상 작물 수 : ('20) 534천점/226종 → ('25) 600/246

○ 가축분뇨 퇴·액비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성분(N·P·K) 표시제*, 미생물제제 품질·기능성 인증제** 도입('25)으로 자재 적정사용 유도

* 보관기간에 따른 가축분뇨 퇴·액비의 성분변화 연구('20~'22, 농진청) 후 단계적 도입

** (기능성 인증) 약취물질 분해, 부숙 촉진, 질소 고정 등/ (품질 인증) 미생물 함량 등
- 기업·기술센터·미생물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농가에 미생물제제 처방 강화

○ 비료·농약 사용 감축 위해 **윤작천적 활용** 등 연구 및 농가 교육 확대

□ 농가별 농약 사용량 관리 및 자가진단으로 농약 적정 사용 유도

○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농진청)과 농업경영체 정보 간의 연계를 통해 농가별 농약 구매량 DB화, 농가 단위 농약 사용 관리 기반 마련('22)

○ 사진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진단 시스템 개발로 농업인 주도의 적정 농약 사용체계 구축('25, 농진청)

- **가축분뇨·농업부산물**을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농업 모델** 구축
 - **경축순환 시범지구**(‘21~, 매년 3개소, 환경부 협업) 조성, **가축분뇨의 자원화*** 추진 등으로 활용 범위 확대
 - * 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공공처리시설(환경부) : (‘21) 14개소 → (‘25) 26
 - 왕겨·보릿대 등 **농업부산물의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농가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 확대 지원(‘22, 농진청)

- **토양양분 정보의 종합 관리체계** 구축 및 **농업환경 관리 제도화**
 - **흙토람, 가축분뇨시스템, 비료판매시스템, 친환경인증정보** 등을 연계하여 **토양 양분 정보를 DB화**(‘25)
 - 농지·농업용수·농업생태계 등 **농업환경 전반을 관리·보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등 검토*
 - * 농업환경 보전 목표, 정책의 범위, 관리 대상 지역의 설정 및 의무와 제재 규정, 점검 및 관리체계, 농업환경 관련 정보체계 구축 등

1-② 지역 단위 농업환경 보전 활동 강화

< 추진 목표 >

◇ **시·군 단위 농업환경 보전계획 수립(개) : (‘20) 67 → (‘25) 100**

- **지자체별 농업환경 보전계획 수립** 추진
 - 現 지자체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 ‘농업환경 보전계획’으로 확대(‘21)
 -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추진방안 등을 포함
 - 우리부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 우수 시·군에게는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포상·홍보** 등 추진
- **공익직불제** 방향에 맞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개편
 - **생물다양성 및 탄소 감축**에 효과가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 수준별로 계층화하여 **선택형직불제로** 구성하는 방안 등 검토
 -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등은 기본형직불제로 통합 검토
 - 사업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원기구 지정·운영**(‘22)

2-①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 추진 목표 >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 (25) 친환경 재배면적의 20%

-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으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22)
 - (개념) 농업환경관리를 전제로 친환경 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 추진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권역
 - 집적지구에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적용을 의무화하여 지구 내 관행농가의 쉬운 친환경농업 전환 환경을 조성, 친환경농업의 확대 구심점 기능
 - (지정) 現 친환경농업지구 중에서 집적지구를 우선 지정*
 - * 친환경농업지구 외 새로운 지구 지정 가능성도 검토
 - 친환경농업지구 중 연접 면적, 주변 환경, 경축순환 등 자원순환 구조, 안정적 판로 확보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
 - * 품목별(노지, 시설, 과수 등) 특성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 마련
 - (육성) 現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개편하여 집적지구의 규모 및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 단계별 면적기준 예시 : (예비지구) 쌀 50ha/읍·군·과채류 10ha → (기초지구) 쌀 100ha/읍·군·과채류 20ha → (선도지구) 쌀 200ha/읍·군·과채류 30ha
 - 사업 초기에는 SW 중심으로 지원하고 일정 기간 후 사업역량을 평가하여 HW 지원, 단년도 사업 보다는 3~5년 장기 사업으로의 전환도 검토
 - (규모화) 집적지구 내 농지은행 보유 농지는 친환경농가 우선 임대, 쌀은 친환경 전환을 위해 들녘경영체 사업과 연계 추진

< 집적지구 단계별 목표 및 지원내용 >

- ◇ (예비지구) 일반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통해 집적지구 규모화 추진
 - 일반농가 대상 친환경농업 교육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 ◇ (기초지구) 생산성 제고, 유통 효율화 등을 통해 집적지구 경쟁력 제고
 - 영농단* 지원, 유기농업자재 활용 항공방제 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유통시설·장비 지원, 생산비 절감 기술 개발·적용,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등
 - * 집적지구 내 젊은층 중심으로 농작업 대행·신규진입자 교육·생산관리 등 담당
- ◇ (선도지구) 집적지구 중심의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연계 지원 등

- 체계적인 집적지구 육성을 위한 법제화 및 새로운 인증체계 도입 검토
 - 집적지구 내 규제 특례, 인증 우대,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등 법제화 검토
 - 집적지구 내에서 과정 중심의 인증 시범 도입 여부 검토

2-②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강화

< 추진 목표 >

-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확대(%) : ('20) 5.2 → ('25) 10
- ◇ 유기 축산물 인증농가 수(호) : ('20) 104 → ('25) 160

- 지구 내 농지 임대차, 귀농교육 등을 통해 젊은 인력 유입 촉진
 - 농지법 시행령 개정('20.8)에 따라 집적지구 내 농지 임대차 허용*
 - * 집적지구 지정연도부터 10년간 허용, 10년 경과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인정
 - 친환경농업에 관심있는 귀농자 대상 친환경교육 확대 추진
 - 친환경자조금을 활용하여 교육자료 제작·제공, 강사 풀 협조
- 관행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등으로 일반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 유도
 - 로컬푸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전국 10개) 등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교육 지원

- 지자체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역할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센터가 지역별 맞춤형 기술 개발 및 교육을 선도하도록 지원(22)

○ 일반·무항생제 축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실시, 인증 품목* 수 확대 등을 통해 유기 축산 활성화

* 현재 한우 및 육우(식육), 젓소(시유), 면양 및 염소(식육, 시유), 돼지(식육), 육계(식육), 산란계(알), 오리(식육, 알), 메추리(알), 사슴(식육) 등 11개 품목

□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제고 및 탄소 감축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 기후변화로 인한 월동 병해충 방제를 위해 침투이행성 제재 개발 등 기존 자재의 효과 증진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기술 개발 추진
- 친환경인증 교육에 저탄소 농법 기술 교육을 포함시켜 친환경농가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친환경농지의 환경관리 강화 및 친환경직불제 개편

- 비산오염 방지 위해 드론·무인 헬리콥터 등 항공방제업 신고제 도입(23), 피해 발생 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 친환경농지와 일반농지와의 경계는 경관작물 식재 등을 통해 완충지대로 지정, 해당 손실의 일부를 친환경농업직불금 등으로 보전 검토
- 인증심사원의 환경심사 역량 강화* 및 농가별 환경 위험요인 DB화를 통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 위해요인 관리 강화(22)

* (현행) 산업기사 자격, 경력 2년 이상 → (개선) 현행 + 환경 관련 교육 강화

- 친환경농업의 환경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상한 면적 등 개편 추진

* 친환경농업 쏠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연구 추진(농진청)

참고2 집적지구 사례 : 충남 아산「푸른들 영농조합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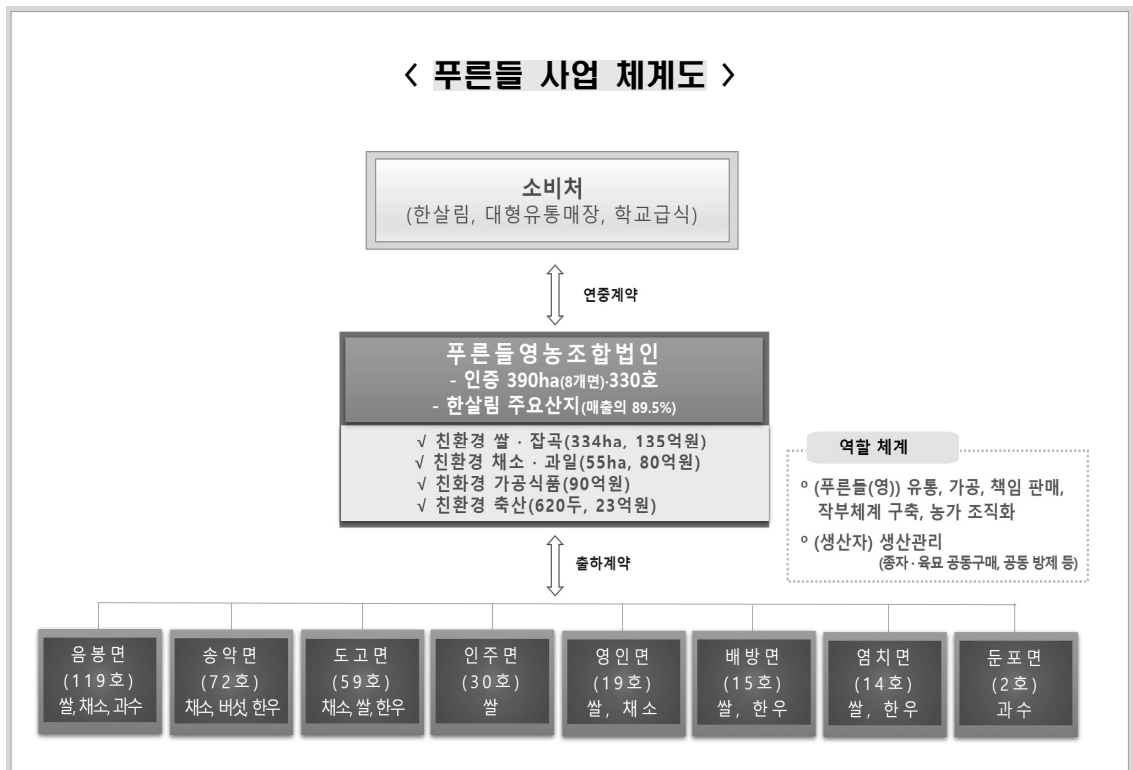
◆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은 쌀·축산·채소 등 다품목 집적지구 사례로, 지구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주체의 역량과 양자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기반한 긴밀한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 일반현황

- (개요) 2000년도 설립(현재 직원 50명), 조합원 330명(출자금 약 46억원)
 - 조합원은 모두 (사)한살림 생산자연협회(이하, 생산자연협회) 소속으로, 조합원 각각은 아산시 내 8개면에 분포(친환경인증면적 390ha*)
 - * 쌀(334ha, 전체 면적의 85.8%), 노지 및 시설채소(38ha), 과수(14ha), 버섯(3ha), 양계(1ha)
- (사업 실적) '20년,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매출액은 약 340억원, 이 중 약 90%는 한살림, 10%는 학교급식과 대형유통업체 매출
 - 푸른들은 약 50여개 품목을 취급하며, 조합원 생산물량 100% 판매
 - 한살림 납품 물량은 푸른들과 생산자연협회, 농가 3자간 약정을 통해 공급
- (특이사항) 친환경농업 유지·확대 위해 각종 기금 조성·운영 중
 - (공동기금) 생산자연협회가 농가별 매출액의 1%를 거출하여 종자 및 육묘 보급, 공동방제, 농가 기술교육 등 농가 생산 지원에 사용
 - (생산안정기금) 푸른들이 조합원 회전출자 등을 통해 조성하여 조합원 소득 안정화(자연재해 등으로 소득 감소시 최근 3년 평균 소득의 80% 보장)에 사용
 - (농민재단) 푸른들이 법인 수익의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선진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조합원 복지사업에 사용

□ 주요 사업별 특징

- (쌀)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으며(약 36%), 일부 농가에서는 친환경 밀(20ha)과 친환경 콩(50ha) 이모작을 하기도 함
 - 자체 RPC에 저탄소 에너지시설인 왕겨 연소시설*을 갖추고 있음
 - * 왕겨를 태워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여 쌀을 건조, 화석원료 사용을 최소화(등유 사용 대비 76.2%의 온실가스 감축 예상), 왕겨숯은 토양개량용으로 경종농가에 제공
- (채소 등) 토마토, 오이 등 시설채소(1천톤)와 과수(배, 200톤)는 자체 APC를 통해 전처리·포장되어 한살림에 납품
- (축산) 사료공장(<유>푸른들축산)과 육가공업체(<주>한들식품)를 설립하여 유기한우를 생산*, 한살림 및 학교급식에 납품
 - * 푸른들 직영 120두, 조합원 농가 500두, 총 620두 유기한우 사육
 - 사료 생산은 조합원 농가의 볏짚과 농업부산물을 이용, 유기한우 농가 퇴비는 다시 일부 친환경 경종농가에 제공하여 부분적 경축순환 실천



3-① 친환경농식품 판로 확대

< 추진 목표 >

◇ 친환경농식품 판매망 확대 : (현) 학교급식, 생협 중심 +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편의점 등으로 다변화

□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지역 내 친환경농식품 소비 확대

○ 지자체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 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지역 친환경농식품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등 판매 확대 방안 마련('22)

* 11개 로컬푸드 매장 조사 결과,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은 전체의 11.4%('2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지자체는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교육 등 지원방안 마련('22)

□ 규격·제도개선 등으로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및 공공급식 공급처 다양화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학교급식 품위 기준* 마련(자조금)

* 학교급식 품위 기준이 일반농산물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친환경농산물 취급을 꺼리는 등의 문제 발생

○ 유기와 무농약의 가격 차이를 학교급식 가격 결정*에 반영(지자체)

*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유기와 무농약농산물 가격을 큰 차이 없이 책정하여 유기농가들이 무농약으로 전환하는 사례 발생

○ 지역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방안 검토(지자체)

- **친환경농식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입증**(농진청)을 통해 환경부의 **녹색제품***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 녹색제품 지정시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 (녹색제품구매법 제3조)
- **군 급식에 지역 친환경농식품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생협과 친환경전문점의 판매역량 강화 및 대형유통업체·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로의 친환경농식품 판로 확대**
 -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대형유통업체 및 편의점 등) **공동 판촉홍보 강화,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용자 지원 한도 확대**(30억원 → 50)
 - **농가별 온라인 유통경로 맞춤*** 설계, 입점 지원·상품페이지 제작·커뮤니케이션 교육·프로모션 지원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 확대**
 - * (출발형) 네이버 등 오픈마켓 진출 → (도약형) 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 **농산물 유통 방향에 맞춰 친환경농산물 유통 효율화 방안 수립**(‘22)
 - * 친환경농산물 유통 정책의 성과와 한계 검토 후 개선방안 도출(연구용역 중)
 - **유통정보조사 시스템 확대 개편**(‘22) 등을 통해 정책 수립을 뒷받침
 - 친환경 소매가격 조사 품목 확대(44개 → 52개), 친환경농업 생산·출하·유통·소비 관련 빅데이터 수집·활용 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 수급조절 등 자조금의 역할 확대 및 강화**(자조금)
 - **민간 부문간 협의를 바탕으로 가공 및 유통분야 자조금 거출 확대 검토, 수급조절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신사업 발굴, 자조금 관리체계 정비 추진**

3-② 친환경농식품 소비 확대

< 추진 목표 >

- ◇ 환경가치를 고려한 친환경농식품 구매비율(%) : ('20) 27.5 → ('25) 50
- ◇ 가공, 외식,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식품 소비 확대 기반 마련

- 생산자·소비자·기업·정부가 협력하여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 친환경 농식품 구매 등 환경을 위한 소비자 실천 매뉴얼*을 제시하고, 환경 밥상 식단 등 개발·보급('23, 환경부 협업)
 -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장 적은 제품 구매하기 등 소비자 실천을 탄소발자국으로 계산하여 제시
 - 친환경농산물 가치소비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생산자는 친환경포장재 적극 사용, 소비자·기업은 해당 제품 우선 구매 등 협력모델을 마련하고, 우수 단체·기업 등에 포상 추진
- 친환경농식품의 환경가치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
 - 생협·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공동체지원농업 확대(자조금)
 - 식생활교육기관(전국 65개소)를 통해 교사·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등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 친환경농업의 환경기여도 연구(농진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교육·홍보 강화
- 학생, 가족 등 친환경농식품 잠재 소비층 대상 교육·체험 확대
 - 창의적 체험활동·탄소중립 시범학교와 연계한 친환경 교육 확대

- 가족 단위로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소비 등이 가능하도록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확대*

* 신규 조성 계획(개소수) : ('21) 1개소 → ('23) 3개소 → ('25) 6개소

□ 가공업체 원료구매 지원, 친환경소재 R&D 등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 유기가공식품업체에 가공원료 매입자금 금리 우대 지원(가점 적용), 시설 개보수 등 지원, 컨설팅 지원 확대(우대기업 적용) 등 추진('22)
- 밀키트 수요 확대 등 식품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 천연 원료 향미 소재 및 친환경 포장재 등 R&D 지원('21)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 원료 5% 인정, 무농약 원료 최소 사용기준 완화(50%→30) 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개선 검토

□ 해외 농식품 정보 제공 및 동등성인정협정 등 수출 기반 조성

- 수출국 시장·통관·유통업체 정보 제공, 해외 네트워크(aT, 바이어 등) 연계 홍보 강화, 해외 인증 취득 비용 지원 등으로 수출 확대 추진
- 업체 수요가 높은 국가 중심으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협정 체결

□ 친환경음식 표시, 음식점인증제 활성화 등으로 외식시장 소비 확대

-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음식에 ‘친환경’ 표기가 활성화되도록 홍보

* 예시 : 친환경(유기 또는 무농약) 토마토를 사용한 샐러드

- 농가·외식업체·지자체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민간 차원의 친환경 음식점 인증제 활성화 검토

V

기대 효과

- **친환경농업 확대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이 감축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 유기농업 수행 시 단위면적당 0.93tCO₂/ha/yr 온실가스 감축('18, 日 농림수산성)
- 친환경농업은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켜 **생물다양성 증대***에도 기여
 - * 유기농지에서의 생물 종(Species) 수는 일반농지에 비해 30% 더 높음('21, EU)
- **집적지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가능**
 - 집적지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비의도적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
 - 집적지구를 통해 **생산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및 대형유통업체·가공원료 등으로의 **판로 확대**에 기여
- **친환경농업 전 과정에 걸친 생산자·소비자·기업·정부 간 협력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 소비자단체의 환경운동과 친환경농식품 소비 확대를 연결하여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가능
 -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환경가치 소비 확산과 다양한 유통채널 구축, 가공·외식산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식품 시장규모 확대** 가능
 - 생산자·소비자·기업·정부간 **탄소감축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 토대** 위에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가능

- (과제 담당부서 및 기관) 동 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과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

- (지방자치단체) 동 계획에 따라 자체 실천계획 수립·시행
 - 농식품부가 지침을 제시, 광역·기초 단위에서 각각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지자체는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이행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매년 기관별·지자체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및 지자체에 계획 보완 요청

참고 3 세부 추진과제 및 담당부서 목록

연번	추진과제	담당부서(협조부서)
① 탄소 감축 농업 기반 구축		
①	농업 환경관리 강화	
	적정 시비체계 구축	친환경농업과, 농진청, 농기자재팀, 축산환경지원과, 종자생명산업과, 농관원
	농가별 농약 사용량 관리 시스템 구축	농진청, 농기자재팀(정보통계담당관실)
	자원순환형 농업 모델 구축	축산환경지원과(환경부), 농진청
	농업환경 종합 관리체계 구축	친환경농업과(환경부, 농진청, 농기자재팀, 축산환경지원과)
②	지역단위 농업환경 보전 활동 강화	
	지자체별 농업환경 보전 실천계획 수립	지자체, 친환경농업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개편, 전문지원기구 운영	친환경농업과(공익직불과)
②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①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친환경농업과(농지과, 식량산업과)
	집적지구 법제화 및 인증체계 개편 검토	친환경농업과
②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강화	
	젊은 인력 유입 촉진	친환경농업과(자조금), 경영인력과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 유도	친환경농업과, 지자체, 축산환경지원과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농진청, 친환경농업과(재생팀)
	친환경농업에 대한 환경관리 및 평가 강화	농기자재팀, 농관원, 친환경농업과(공익직불과)
③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①	친환경농식품 판로 확대	
	지역단위 푸드플랜 연계 지역 내 판로 확대	지자체, 농촌사회복지과
	급식시장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친환경농업과(자조금, 환경부, 국방부), 지자체
	생협과 친환경전문점의 판매역량 강화 및 유통채널 확대	친환경농업과, aT
	친환경농산물 유통 효율화 방안 수립	친환경농업과
	유통정보조사 시스템 확대 개편	친환경농업과(자조금)
	자조금 역할 확대 및 강화	친환경농업과(자조금)
②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생산자·소비자·기업·정부 간 협력을 통한 소비문화 조성	친환경농업과(환경부, 자조금, 식생활과)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교육 강화	친환경농업과(자조금), 식생활과, 농진청
	학생·가족 등 소비자 대상 친환경 교육·체험 확대	친환경농업과(농촌산업과)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 지원	친환경농업과, 식품정책과 식품진흥과, 수출진흥과
	외식시장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친환경농업과, 자조금

참고4 제4차 계획과 제5차 계획 비교

	제4차 계획	정책 수단	제5차 계획
목표	인증면적 증가 농약·비료 감축	+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인증면적 증가 농약·비료 감축 소비자의 환경 인식 제고
환경	체계화된 정책 부재	+ 비료·농약·자재 적정사용체계 구축 농업환경보전 실천 확대	농업환경 관리 ⇒ 탄소 감축, 친환경농업으로의 쉬운 전환
생산 기반	친환경 단지	+ 기준 개편 (연접성, 주변환경 자원순환 구조 판로와의 연계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친환경 집적지구
판로 확대	학교급식 (공공소비) 생협	+ 다양한 유통채널과의 협력 강화	공공소비·생협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대형유통업체 편의점 온라인
소비 문화	안전 건강	+ 소비문화 조성 환경가치 홍보 소비자 체험·교육	환경 가치소비